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은 동아시아 핵 경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트럼프는
전쟁 위협
중단하라

2, 3면

아일랜드 여성 노동자
특별 기고
아일랜드 낙태권
옹호 투쟁

11~12면

KT전국민주동지회
박철우 의장
인터뷰

7면

민영화로 가는 길,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4면

일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6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브렉시트 협상의 함정

5면

변혁당의
비판에 답함

8~10면

특권학교, 단계적 전환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선발권을 없애고 일반고와 동시 전형을 한다고 해도, 특권학교가 존재한다면 그쪽으로는 쏠림은 여전할 것이다. 벌써부터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 대원외고, 전주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상위권 특목고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 대학서열화가 더욱 공고해지고 특권학교로 인한 고교 서열화까지 확대되면서 교육 불평등이 커졌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자사고와 특목고는 ‘우선적인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특별 재정 지원’이라는 3종 선물 세트를 받았다.

특목고·자사고가 매년 11월에 일반고보다 한 달 먼저 학생을 뽑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면서 일반고 슬럼화가 진척됐다. ‘다양성’의 이름으로 허용된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은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었다. 전체 수업에서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넘는다. 이 학교들은 법인의 교육전입금은 별로 늘리지 않고 학부모의 고액 납부금에 의존하는데, 이런 재정 구조는 노동계급의 자식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다.

교육부의 ‘2013년 학교별 연간 학비 현황’을 보면, 일반고보다 특권학교가 대략 8배 정도 학비가 많다. 청심국제고는 1천5백만 원, 경기외고는 1천2백만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특권층을 위한 ‘귀족 학교’라 할 수 있다.

2009년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이 발

학교 유형별 학생 1인당 연간 학비 현황(2013) (출처: 《2015 교육비평》)

구분	국제고(7)	사립외고(17)	공립외고(14)	자사고(45)	일반고(서울)
연간 학비	8,550,902원	8,373,832원	5,387,147원	8,257,028원	1,062,275원



계급 차별적인 교육 강화하는 특권학교 폐지하라

표한 ‘외고생 학습실태와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수도권 외고의 경우 월 평균 1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정 출신이 16.8퍼센트에 이른다.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특권학교에 갈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계급 차별 교육이 공고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탓에 사교육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07년 23만 4천 원에서 2016년 27만 5천 원으로 늘었다. 2015년 조사에서 광역 단위 자사고로 진학하길 바라는 중학생 중 91.4퍼센트가 사교육을 받았다.

주춤

이러한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비 증가의 고통 속에서 ‘촛불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일 때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 동시

실시”를 공약했다. 그러나 전환 시기, 방식,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안도 특권학교의 교장·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일괄 전환이 아닌 단계적 전환이다. 그조차도 보수적 반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특권학교 폐지는 단계적 전환이 아닌 전면 폐지가 답이다. ‘좋은 교사운동’이 외고, 자사고 전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했는데 ‘법적 근거 삭제’를 통한 일괄 전환(49퍼센트)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정부 출범 초기를 흔히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지금 특권학교를 전면 폐지하지 못하면 보수적 압력으로 동요하다 좌절되고 말 것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4년 당선 후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1년 유예하다, 결국 한 곳도 취소시키지 못하고 완패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다.

진보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벌써부터 주춤하고 있다.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에서 후퇴해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 하는 안이 함께 제시됐고, 절대평가 등급도 9등급으로 설정해 그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미미한 수능 개편 조차도 눈치를 보다가 1년 유예를 했다.

무엇보다, 현행 대학 서열 구조를 유지한 채, 특목고 폐지, 수능 개편,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확산 등 고교체제의 개편은 그야말로 빗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대학서열 체제를 혁파하지 않는 교육 개혁은 물거품이 되기 일쑤다.

대학을 포함해 모든 학교를 평준화하고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김현욱 전교조 교사

문재인의 사드 추가 배치 시도 규탄한다

본지 221호를 제작하는 9월 6일 현재, 문재인 정부가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은 9월 4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배치를 약속했는데, 결국 오늘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늦어도 7일까지 배치를 완료하려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높은 최소한의 방어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명분’은 박근혜 정부도 끊임없이 반복해 왔던 것이다. 사드는 엄연히 동북아시아의 주요 군사 시설들을 겨냥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 체계다. 미 공군 B-1B 폭격기 2대와 일본에서 온 F-35B 스텔스기 4대가 동시에 한반도에 출격하기 시작한 이 와중에 한국의 사드 기기들은 이제 일본의

육상 이집트 체계와의 합체를 기다리며 중국의 군사 시설을 겨냥하게 된다.

문재인은 김관진·황교안·한민구 등의 새벽 기습 배치를 의식해서인지 사전 고지를 약속하면서 이를 민주적 소통인 양 포장했지만 교활하고 얄밟게도 사드 추가 배치의 수순은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밟아 나갔다.

경찰은 성주·김천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조차 가로막았다.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와 국방부가 짜 놓은 각본대로 치러졌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위해 주민 1백30여 명이 사는 마을 소성리에 전국 시위집단 경찰력 1만여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문재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청와대 행정

관들이 수도 없이 다녀갔지만 열심히 적기만 했다. 언론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면서 여론 물이를 했다. ...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드를 빨리 철거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 ... 문재인 정부, 사드만큼은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다.”(성주조전면 투쟁위원회 이종희 위원장).

문재인은 박근혜 적폐 1호였던 사드 배치의 계승자가 되고 말았다. 사드 포대의 수도권 추가 배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역은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표적이 될지 모른다. 왜 이런 위험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떠안아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선택이 한반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김어진

왜 성주 소성리 주민들이 중국·러시아 미사일의 표적이 돼야 하는가?

트럼프는 대북 전쟁 위협 중단하라

김영익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끝내 감행하고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앞으로 “더 많은 선물”을 보내겠다고 했다. 이렇게 가면 미국과 한국이 설정한 ‘레드 라인’을 북한이 넘는 것도 그리 먼 미래가 아닐 듯하다.

북한 핵실험 직후, 트럼프 정부는 온갖 호전적인 말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두고 보자”고 했다. 국방장관 매티스도 “완전한 절멸” 운운하며 “효율적이고 압도적인 [군사] 대응”을 언급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한반도에서 계속 긴장이 쌓인 게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 이것이 곧바로 전면전의 위기로 치달을 것 같진 않지만, 현 긴장 상황이 당분간 더 악화할 것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에도 악영향을 줄 듯하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미사일 규제를 풀어 주고 첨단 무기 및 기술 도입을 허용하는 등 한국의 군사주의에 힘을 실어 주는 게 불길하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 한반도 긴장도 악화하면, 미래에 이 땅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수소폭탄 실험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분명 나쁜 소식이다. 북한은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런 행태가 결국 제국주의 국가들의 한반도 관여와 군사 행동의 명분만 제공하며 한반도 불안정성을 악화시켰다. 북한 핵무기는 결코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북한 핵무기가 동아시아 정세를 뒤흔들고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게임 체인저)이라고 보는 것은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비과학적 인식이다. 평화네트워크 정육식 대표는 이렇게 지적했다.

“흔히들 북한의 핵탄두 장착 ICBM 보유를 ‘게임 체인저’라고들 한다. 과연 그럴까? 미국은 아직도 7천 개 가까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한국은 그 우산 아래에 있다. 한미동맹과 북한 사이의 재래식 전력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경제력은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이다.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적 능력은 영원히 한미동맹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세계 최강의 군사적 능력을 가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북한을 압박하고 그 과정에 동맹국들을 동참시켜 왔다. 그리고 북한 지배 관료들은 그에 반발해 핵무기 개발로 치달았다.

일부 평화주의 좌파는 북한 핵무기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군비 경쟁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분명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 양상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이 경쟁의 가장 주요한 양상은 북한 핵·미사일이 아니라 동아



문재인 정부의 군사주의 강화는 한반도에 더 불안정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시아 패권을 두고 미국, 중국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바마가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에 돈을 쏟아붓고 트럼프가 집권 첫해에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증액한 것은, 북한 핵무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경쟁 강대국들에 대해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중국의 (핵)군비 증강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은 이 점을 숨기려는 미국의 구차한 변명이다.

따라서 최근의 북한 핵·미사일 실험은 제국주의 간 경쟁으로 동아시아 불안정이 점증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오히려 최근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에 자극 받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보는 게 옳은 관찰일 것이다.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동학(과 지정학적 맥락)에 관한 분석을 결여한 채, 북핵 문제를 ‘군사주의 대 군사주의’의 대결이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지금의 한반도 긴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봉쇄

북한 핵실험 이후 트럼프 정부는 여러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모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

안정만 더 심화시킬 조처들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전면적인 경제 봉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다.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등을 실시해 북한 경제를 제대로 봉쇄하려면 중국·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무기를 싫어하지만 봉쇄 수준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데는 반대한다. 제재 강화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주로 중국·러시아 기업들을 겨냥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시행할지 모른다. 그러면 중국 등이 크게 반발하며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다.

한·미·일은 군사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해 줬다. 이제 한국은 전술핵에 버금가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 탄두를 마음껏 만들 것이다. 사드 발사대 4기도 곧 성주공포장에 배치된다.

그리고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책임과 비용

부담을 지라고 한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상당히 정교한 군사 장비를 대량 구입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트럼프가 문재인과 통화하면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군사 무기와 장비를 한국이 구매하도록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내년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며 군사력 증강을 공언했기에, 한국이 미국의 첨단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할 것은 분명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나 패트리엇-3 개량형 등이 조기 도입될 듯하다. 심지어 아예 사드 포대를 한국이 구입할 가능성도 다시 나오고 있다.

문재인은 원유 금수 등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에 보조를 맞추며, 사태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그가 직접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며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등을 유엔 안보리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취임 후 거의 처음으로 국가 안보 수호자와 군 통수권자의 면모를 느끼게 한다”고 문재인을 칭찬할 정도다.

한국 우익은 지금이야말로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할 때라며 성화다. 그런데 국방장관 송영무가 전술핵 배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등, 문재인 정부 내에도 이 정신 나간 주장에 동조하는 인사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12월에 ‘김정은 참수 부대’를 창설한다.

쌍중단

따라서 한국의 진보·좌파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미국 제국주의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반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의 입장은 문제가 많다. 8월 29일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자,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으로 “우는 아이 달래니 더 크게 우는 꼴”이라며 북한만 맹렬히 비난하며 이후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했다. 그 논평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제재 강화나 군사 행동에 관한 비판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물론 핵실험 이후에는 태도를 조금 바꿔 이정미 대표가 남북 대화는 뒤로 미룬 채 북한에 대한 보복 수위를 높인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내용은 여전히 쌍중단 제안 수용 등 외교적 해법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는데 머물러 있다. 그나마도 중국이 애초에 제안한 쌍중단, 즉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연습 동시 중단”이 아니라 “북한 핵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전략자산 배치 철회”로 슬쩍 후퇴해 버렸다.

최근 한반도 상황에 관한 평화주의 좌파의 대안도 중국이 제안해 온 쌍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에 머물러 있다. 최근 평화주의 단체들이 주도한 시국 서명운동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으로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 내 달라는 청원이었다.

평화주의 좌파는 ‘한반도 비핵화’ 같은 요구를 사드 반대 연대체 같은 공동전선이 채택하는 게 미국과 한국의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데서 대중적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방향은 문재인 정부한테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하려는 시도와 분리되기 어렵다. 현재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이런 공평무사 양비론적 요구를 채택하면 (좌파적 미사여구로 아무리 포장해도) 강대국들의 대북 압박과 이에 호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호전적 대응을 일관되게 반대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면, 북핵 문제를 다룬 외교 무대에서 쌍중단·쌍궤병행 같은 제안이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20년 넘게 이와 비슷한 협상 조건을 갖고 술한 협상과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합의는 번번이 폐기됐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평화를 위한 안정적 합의를 한다는 것은 수소에겐 젖을 기대하는 것이다.

노동자 운동은 외교적 해법 제시가 아니라 반제국주의 강령을 분명히 하고, 노동계급의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 건설을 지향해야 한다.

레닌의 《제국주의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다

김영익

중·고교 교과서는 보통 제국주의를 19세기 후반~20세기 중엽까지 존재한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로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계에서도 제국주의는 엄연히 현실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 강대국 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좌파들은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이 아니라 평화주의를 받아들인다. 얼마 전 노동당이 “20세기 초반 개념”이라며 강령에서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은 최근 사례 중 하나다.

물론 지난 1백 년 동안에 자본주의는 변했다. 공식 식민지는 몇몇 예외를 빼고는 사라졌다. 그리고 레닌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사용된 가공할 핵무기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제국주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비롯해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제국주의 분석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독점

레닌은 《제국주의론》을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인 1916년에 썼다. 그 책에서 그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특징의 발전이자 그 직접적 연장”이 제국주의라면서,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임을 강조했다. 즉,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 단계라고 규정한 것이다.

레닌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당시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자유경쟁을 ‘자연법칙’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독점이 자유경쟁을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자본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윤을 계속 재투자하면서 덩치를 키우게 됐고, 약체 기업을 더 강하고 효율적인 기업이 집어삼켰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독점 기업(거대 기업)들이 경제를 쥐락펴락하게 됐다. 그리고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융합된 ‘금융자본’이 전례 없이 집중된 경제력을 구축했다.

이렇게 독점자본주의가 확립됐다고 해서 경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윤과 시장점유율을 늘리려는 독점 기업들의 욕구는 자국 경제로 만족할 수 없다. 독점 기업들은 시장과 원자재 등을 놓고 세계시장에서 필사적으로 경쟁했다.

레닌은 이때 자본 수출이 중요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아프리카 등지의 저발전 지역이 대기업들의 원자재 공급원이자 투자 기회 제공처가 돼 줬다. 강대국의 자본가들은 잉여 자본의 상당 부분을 저발전 지역으로 수출했다. 그리고 거기서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

이제 경쟁은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지리적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독점 기업들과 연계를 맺은 국가들이 국익을 위해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



김종욱 디자인

려고 애쓰고, 그래서 독점 기업들 간의 경쟁은 세계 여러 지역을 차지하려는 국가들 간의 투쟁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분할하게 됐다.

이렇게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자본에 비례해”, “힘에 비례해” 세계를 분할하지만, 얼마 안 가 강대국들이 세계 재분할을 둘러싼 투쟁으로 나아간다고 레닌은 지적했다. 자본주의의 역동적 성격 탓에 경제 발전의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균등 발전 때문에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순위도 바뀌게 된다.

그러면 한때 강대국들의 힘의 차이에 조응했던 기존의 ‘분할’은 더는 맞지 않게 되고,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이 차지한 ‘전리품’을 다시 나눌 것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간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고, 강대국 간 갈등은 다시 커진다. 레닌이 보기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평화는 결코 항구적일 수 없

고 전쟁과 전쟁 사이의 휴전(무장한 평화)일 뿐이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정리해 보면, 그가 제국주의를 그저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로 협소하게 이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레닌이 보기에,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정상 상태에서 잠시 벗어난 일탈이 아니고 오히려 자본주의의 내재적 동학에서 비롯한 결과였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라고 봤다.

노동계급

물론 레닌의 《제국주의론》에는 약점도 있다. 예컨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이라는 ‘금융자본’ 개념은 당대 독일의 경제 상황에는 맞았지만, 영국 등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경제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즉, 레닌은 당대의 ‘금융자본’ 구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자본수출과 식민지 확장의 관계는 실제로는 레닌이 주장했던 것보다 더 불균등했다. 예컨대 당대 미국, 러시아, 일본은 모두 제국주의 국가였지만, 자본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거대 기업과 제국주의 국가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이지만, 중국·러시아 등 경쟁 강대국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 경쟁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즉,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나온 지 1백 년이 지났지만, 그가 본 제국주의의 핵심 특징은 변하지 않았다.

제국주의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회세력인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주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론이며, 핵무기 경쟁의 시대에도 그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박근혜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법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이낙연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견해를 밝힌 데 이어 경제부총리 김동연, 행정부총장 김부겸 등도 규제프리존법 지지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서비스법 통과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 규제 완화·민영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이름에서 보듯 서비스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상위법이다. 이 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치가 담겨 있다. 이 법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의료, 교육, 통신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포함된

다. 게다가 다른 법률의 상위법인 ‘기본법’이어서 다른 법이 정한 다양한 규제 조처를 무력화할 수 있다. 예컨대 의료법이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된다.

또, 서비스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서비스 산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해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여론이나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규제 완화에 주저할 때 이를 신속히 강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근혜’ 정부는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 그토록 애쓴 것이다.

민중당은 보건 의료 부문만 빼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서비스법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

한”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투자 개방형 학교 설립이나 철도 민영화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법이다. 또, 법안의 근본 취지 때문에 보건 의료 부문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외될지는 알 수 없다. 예컨대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관한 규정은 관광법에 명시돼 있어 보건 의료 부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포괄적

규제프리존법도 포괄적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한다.” 수도권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어떤 종류의 사업에 대해서든 규제프리존을 설치할 수 있다. 서비스법과 차이가 있다면 89개 조문에 걸쳐 해당 법

률을 일일이 거론한다는 것 정도다.

병원(의료법인)은 법률에 명시된 것 외에 마음대로 부대사업 범위를 늘릴 수 있고,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또는 세포배양 의약품”도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가 마음대로 제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미용업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이 정한 규제를 무시하고 사업자에게 “국유·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공공 병원 민영화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매립지 준공검사 후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있고, ‘민간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전자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고 후자는 전력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 ‘농지 위탁 경영

허가’, ‘독점규제 완화’ 등 기업주·부자들의 돈벌이를 돕기 위한 조처도 포함됐다.

‘자동차 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항공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률에도 예외를 둘 수 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주들의 규제 폐지 청원을 집대성한 ‘최순실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무차별한 규제 완화가 낳을 가장 끔찍한 미래는 세월호 참사가 보여 준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몇몇 ‘독소조항’을 빼는 것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 당장 폐기돼야 한다.

장호중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의 함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뻔하게 예상됐던 것처럼, 영국 보수당 정부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사이의 브렉시트 조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근본 문제는 협상 양측 힘의 불균형이다. 영국 자본주의는 향후 교역 관계를 두고 유럽연합과 합의를 꼭 봐야 한다. 영국 자본주의가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또 유럽 대륙에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의 공급망이 끊겨 커다란 혼선을 겪지 않으려면 말이다.

유럽연합은 영국보다 훨씬 크다. 협상이 결렬돼 무역협정을 맺지 못한 채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그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더구나,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등지에 기반을 둔 금융 중심지들은 런던 금융가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한편, [브렉시트 뒤로도] 유럽연합에 남을 회원국 27개국은 크게 두 가지 이



웃는 게 웃는 게 아냐 온갖 협정이 도사리는 탈퇴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테리사 메이(왼쪽)

유로 영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하나는 일반적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다. 일반적 이유는 영국을 유럽연합 탈퇴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9월 1일 유럽연합 측 수석대표 미셸 바르니아는 이 점을 분명히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협상은 일종의 교육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보여 줄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돈 문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영국이 탈퇴하려면 [소위 ‘이혼합의금’으로] 1천억 유로[약 1백35조 원]를 내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의 법적 근거는 상당히 수상쩍다. 유럽연합 탈퇴 과정을 규정한 그 유명한

리스본조약 50조 어디를 봐도 그런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은 없다. 그저 “[탈퇴국과] 유럽연합 간 향후 관계에 관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사실 바르니아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바라는 것은 영국이 그 돈을 내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바로 이 “향후 관계” 수립을 미루는 것이다.

“향후 관계”

그리스 사례에서 봤듯이, 유럽연합은 자기 실속 문제를 난해한 법률 용어로 포장하는 데 아주 능하다. 영국은 유럽연합 예산에 대한 순 기여도가 가장 큰 국가여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향후 몇 년간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위한 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예산이 크게 줄어 회원국 간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니, 영국 정부의 국제무역부 장관 리암 폭스가 유럽연합이 영국을 갈취하려 든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폭스와 총리 테리사 메이가 내세우는 대안 – 세계 모든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글로벌 영국” – 은 순전한 환상이다. 폭스는 테리사 메이의 일본 방문을 수행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답변은 우여곡절이 가득할 일본과 유럽연합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부 장관 데이비드 데이비스는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얼마를 보상할지 액수를 대라는 바르니아의 압박에 저항하고 있다. 이는 보수당 내 탈퇴파가 들고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협상 조건을 따져 보건대 사리에 맞는 일이긴 하다. 유럽연합이 내놓을 카드를 보지도 않고 자신의 최고 카드를 내려놓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앞서 말한] 힘의 불균형 때문에 영국이 양보하는 방향으로 떠밀리고 있다. 이미 보수당은 향후 몇 년을 위한 과도기적 협정을 맺어야 할지 모른다고 암시한 바 있다. 그 협정의 내용은 지난해 보수당 대회에서 메이가 약속한 것보다 영국이 훨씬 더 유럽연합에 얹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노동당은 그런 과도기적 협정의 결과로 영국이 유럽단일시장에 남게 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이는 메이와 데이비스를 압박하는 교묘한 전략처럼 보일 수 있다. 보수당 소속 잔류파 하원의원들이라면 노동당과 함께 영국이 그런 양보를 해야 한다고 투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당의 태도 전환은 제러미 코빈과 노동당 예비내각의 재무장관 존 맥도넬의 큰 후퇴다. 이전까지 코빈과 맥도넬은 유럽단일시장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비판할 태세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부인하려는 노동당 우파 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듯하다.

유럽연합은 유럽단일시장 잔류 조건으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내세운다.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잔류에 투표하자고 주장할 당시 코빈은 이민 통제 강화에 반대했다. 영국이 유럽단일시장에 잔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최근 코빈은 단일시장 잔류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모두에 반대했다.

이제 노동당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없는 유럽단일시장 잔류 주장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주장이 영국 내 유럽 출신 노동자들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똑같이 빠질 협정이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70호 / 번역 김준효

독일 총선

화려한 외관 뒤의 극심한 불평등과 난민 문제

김종환

9월 24일 독일 총선이 치러진다. 지난 12년간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의 기민당·기사당 연합(이하 기민당)이 지지율 약 40퍼센트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기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한 사민당이 크게 뒤지는 2위(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급진좌파 정당인 디링케(좌파당)가 녹색당,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민자당 등과 함께 3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설문조사에서 난민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흑자가 중국보다도 커,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을 누려 왔다. 통계상으로 실업도 낮은 축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외관과 달리, 독일은 유럽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

중위임금의 60퍼센트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사실상 유럽에서 가장 크다.(관련 기사: ‘독일 사회주의자에게 듣는다 — 독일식 노사관계 모델: 누구를 위한 성공의 역사

인가?’) 재산 불평등도 심각해서 독일인 40퍼센트는 변변한 저축조차 거의 없다. 특히 구 동독 지역은 경제 사정이 나빠서 청년층이 빠져나가, 65세 인구가 24퍼센트나 되는 초고령사회다.

주류 언론은 실업이 낮아 독일인의 만족도가 높은 듯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지난 15년 동안 복지는 줄고, “미니잡”으로 불리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대폭 늘면서 ‘워킹 푸어’가 많아졌다.(관련 기사: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많은 노동자들은 “나는 매일 일하러 나가지만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메르켈과 기민당은 더 많은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민당은 기민당을 비판하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2002년 노동계약을 시작한 장본인이자, 메르켈이 집권한 12년 중 8년간(2005~09년, 2013~17년) 연정 파트너였던 사민당의 주장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

하고 있다.

사민당 지도자 마르틴 술츠는 반년 전만 해도 “독일의 샌더스”라 불렸지만(〈한겨레〉), 그가 제안하는 부자 증세는 꾀죄죄하다(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세 3퍼센트포인트 인상 등). 그래서 좌파당은 “부자들의 주머니를 파고들 용기가 결여”됐다고 비판한다. 좌파당은 부유세 도입, 최저임금 36퍼센트 인상 등을 내걸고 있다.

꾀죄죄한 사민당

난민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꼽힌 데서도 그 밑바닥에는 불평등 문제가 깔려 있다. 기민당과 사민당은 복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불법’ 난민 탓인 양 떠든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난민들이 거의 없는, 경제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정작 난민에 대한 반감이 더 높은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나 불평등과 복지 부족을 두고 난민을 탓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다. 그러나 독일은 3년째 재정흑자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990년 통일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대 무역흑자국인 독일이 우간다(경

제 규모 세계 92위)보다도 난민을 적게 받아들였다.(우간다 94만 명, 독일 67만 명)

게다가 독일은 ‘가장 먼저 발 디딘 유럽연합 회원국에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약을 이용해 그리스로 난민을 강제 송환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부유한 독일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는 그리스로 난민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또, 터키와 리비아 등 난민들이 경유하는 국가들에게 난민 유입을 차단하라고도 요구한다.

이처럼 기민당·사민당 지도자들은 ‘난민 수용은 국제적 책임’이라고 떠들면서도, 난민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복지 확충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흘리고, 독일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난민을 단속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그 덕분에 난민 혐오, 무슬림 혐오를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성장할 수 있었다. AfD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하고, 어쩌면 제3당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나타난 패턴이 독일에서도 반복되는 것이다. 즉,

경제 위기를 맞아 주류 정당들이 불평등 확대의 책임을 이주민에게 떠넘기고, 이를 이용해 극우 정당이 성장하고, 그러면 주류 정당들은 극우 정당에게 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주민을 더한층 공격하는 악순환 말이다.

선거가 다가오자 메르켈은 법 기강을 세우겠다며 ‘불법’ 난민을 대대적으로 단속·추방하고 있는데, AfD는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안달이 난 사민당의 술츠도 메르켈보다 더 강경하게 난민을 단속해야 한다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다행히 좌파당은 난민 환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좌파당 소속의 일부 정치인들은 난민 환영 기조에서 벗어나는 행동도 종종 벌인다.) 좌파당의 난민 환영 입장 유지는 난민 환영 운동과 AfD 반대 운동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올해 4월에는 2만 명이 결집해 AfD 반대 시위를 벌였다.

난민을 희생양 삼으려는 극우 정당에 맞서 싸우는 운동뿐 아니라 불평등 확대에 맞서는 거리와 작업장의 투쟁도 확대돼야, 인종차별과 친축에 맞선 좌파적 대안이 성장할 수 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중요 쟁점의 하나가 됐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고용시키는 기존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자회사 고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부산교통공사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계획’을 잠정 확정했는데, 용역업체 11곳에 고용된 노동자 1천4백57명 중 1천66명을 자회사에 고용시키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노동자 중 2백5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1백39명은 계속 용역업체에 남긴다. 진짜 정규직 전환은 단 1명도 없는 것이다.

부산교통공사 사례는 가이드라인의 모순과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 자회사 고용 방식을 포함시켰다. 모회사가 직접 고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용역업체 관리비와 이윤 등의 재원으로 노동자들의 처우를 조금 개선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승급과 호봉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자회사가 고용하면, 모회사 정규직과는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원청의 고용 책임도 회피할 수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현실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사실은 “또 다른 용역업체”에 불과하다고 문제 제기해 왔다. 8월 30일에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자회사, 쟁점과 해법’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생생한 목소리로 자회사의 실태를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이미 경험으로 자회사 방안이 기만인 줄 안다

대부분 정규직과 혼재되어 동일 업무를 하는 철도공사의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시달린다. 정규직보다 월 노동시간은 길고 휴일은 적다. 임금 인상률도 더 낮아 임금 격차는 늘어난다. 또한, 철도공사의 사업 계획이 바뀌면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른 업무로 배치를 요구받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업무량이 늘어난다. 심지어 코레일네트웍스는 철도공사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콜센터 상담사 20여 명을 계약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높다.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는 철도 안전을 위협한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다 보니 인력을 최소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규직이 근무하는 역들과 달리

우리는 역에 2명씩 근무한다. 상행선과 하행선에서 동시에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하면 어느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쪽 승객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철도공사가 우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실도 철도공사 자회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규직은 채 50명도 되지 않는 반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 비정규직은 2천5백 명에 달한다. 그중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받는 노동자들만 1천7백50명이다. 게다가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효율화 방침 탓에 2014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원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의 한 여성 노동자는 “저임금에다 자녀 학자금도 없다. 특히 젊은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높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

다. 직접 고용이 가장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한다.

자회사 추진 속내

앞서 말한 공공운수노조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권구형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의식해, “과거 용역업체와 같은 간접고용 방식의 자회사 모델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직접 고용만이 의미 있고 유효한 방식은 아니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그리고 “현재 중앙건설팅단을 통해서 자회사 모델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기구인 중앙건설팅단에 참가하는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현재 공공기관장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5년 후에 정부 방침이 어떻게 바뀌지 모르는데, 지금 모두 직고용했다가 나중에 다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몸살을 앓을 수 있다. 그러니 자회사에 고용해 놓으면 이후 대처에 용이하다.’ 이 말은 자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사측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해고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추구되는 자회사라면,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고용 등 노동조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제기한 ‘자회사 고용 방식에 대해 흑백논리식 찬성과 반대로 접근하기 보다 ‘어떤 자회사냐 - 위장도급 ·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 법리에서 자유롭고, 경영 전문성과 사업 · 예산의 독립성을 갖추고, 정규직화 취지를 반영하는 자회사 모델 - 논

의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대안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좋은 자회사’ 모델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추진한 서울교통공사 청소자회사들과 서울시농수산물식품사 산하 청소 · 주차 · 교통 ·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다. 서울시 노동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해 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들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만족도는 높지 않다. 김성상 서울시농수산물시장노조(자회사 노조) 사무장은 “말만 정규직화지 임금이나 복지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이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지하철 청소자회사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여성연맹의 이찬배 위원장 역시, “용역업체의 이윤과 관리비를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돌려 주는 것일 뿐 예산을 더 추가로 주지는 않겠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업체 시절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시도했지만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교섭은 자회사의 노사가 해도, 예산 결정과 승인 권한은 공사와 서울시에 있는 구조 탓이다. 그리고 공사는 서울시에, 서울시는 공사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회피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좋은 자회사’ 모델 주장은 그 논리상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건설하기보다는 ‘좋은 자회사’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골몰하게 될 공간이크다.

‘좋은 자회사’의 기준을 두고 정부와 사용자들을 설득하느라 애쓰기 보단,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아래로부터 투쟁 건설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정환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연일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3일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식’에 참가한 데 이어 8월 25일에는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도 참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이런 약속이 무색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직종 · 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관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했는데 국립대병원도 여기에 해당한다.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14곳 중 두 곳을 골라 모델을 만들고 이를 다른 국립대병원에 확대 적용할 계획

이다.

그런데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에만 적용한다. 그 방식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일부 국립대병원 사측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위원회를 꾸리고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채용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실상 사측이 선별적으로 정규직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저 노사합의에 맡겨뒀을 뿐이다.

대표적 국립대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병원장 서창석)은 아예 교육부의 컨설팅 대상 선정을 거부했다. 오히려 8월 중에도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발표 시점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

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환 추진 중 계약 만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버젓이 비정규직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해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겠다는 보건의료 일자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데가 많다. 이용섭 부위원장이 8월 25일 참석한 토론회는 그동안 의료 민영화에 앞장서 온 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석한 토론회였다. 그런데 이 자리는 “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을 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8월 23일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 10대

과제에도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포함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17. 12월)”, “정밀의료 · 재생의료 · 빅데이터 산업 육성(17. 하반기)”, “기술거래 · 특허 강화 · 투자유치 지원” 등 전임 정부들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거론된 것들이 다수 포함됐다. 요컨대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일자리 대안으로 내놓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박근혜 적폐의 대표적 인물인 서창석 퇴진을 요구한다. 이런 자가 여전히 서울대학교 병원장으로 남아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무시하며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것은 도저히 봐 줄 수가 없다.

문재인의 일자리 위원회에 노동조

합이 참가하는 것은 이런 요구를 정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위원회 논의에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생색을 내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고용주인 공공병원에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임금 양보만 요구한다. 내년 예산에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극히 일부만 반영됐다. 이미 새 정부 들어 중단됐던 영리병원(제주 녹지국제병원, 롯데 보바스 병원) 계획이 재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 서비스법 등 대표적 의료 민영화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항의와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다.

장호중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편집자 주] 9월 13일 “KT그룹 적폐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약칭 KT민주화연대)가 출범한다. 1998년 한국통신 민영화가 시작되고서 이래 3만 8천여 명이 감축됐고, 2002년 민영화가 완료되고 2006년에 CP(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로 노동자가 4백 명 이상 사망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다. 이 과정에서 KT노조 집행부는 사측과 결탁해 노동자 공격에 동조했다. 그러나 KT노조 내 민주파 활동가들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 애쓰며 노조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왔다. 이 활동에 헌신해 온 박철우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아래 사진)을 인터뷰했다.

KT민주화연대 결성 취지에 대해 얘기해 달라.

KT 본사와 계열사들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10만 명에 달한다. 아직도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고 KT 노동자들은 극심한 노동 강도와 실적 압박, 저임금 등 인권 유린을 당하며 살고 있다.

CP퇴출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2017년 현재까지 명예퇴직자를 포함해 사망자가 4백19명이나 된다. 이 중에는 자살이 41명, 심장마비·뇌출혈 등 스트레스나 과로로 돌연사하신 분이 1백20명이다. 2012~13년 이석재 회장 시절에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특히 많아 ‘죽음의 기업’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다.

또 하나는 통신 공공성 문제다. 회사는 민영화를 통한 효율적 경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통신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현재 가격의 통신 비용이 전기 요금의 4~5배일 정도로 부담이 크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는데, 결국 ‘공(空)약’이었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총 7조 원의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되는데, 통신 3사 영업 이익이 7조 원이 안 된다. 결국 기업들이 영업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통신 요금을 적절하게 인하하려면 KT를 국유화해야 한다. 매년 해외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5천 억~1조 원, 광고 판촉비가 8조 원, 중복 투자비가 2조 원에 이른다. 국유화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KT 국유화의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얘기돼 왔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운동을 벌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주체는 힘 있는 노동조합이다. 철도의 경험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런 과제들을 위해 KT 노조가 민주화되는 것이 급선무다.

KT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가?
임금이 가장 큰 불만 사항이다. 노조



사진 조종진

조사에서도 95퍼센트 정도가 임금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 지난 십 몇 년 동안 임금이 거의 동결 수준이다.

2009년에 성과연봉제까지 도입돼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전에는 인사 과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노동자와 하위 등급을 받은 노동자 사이에 임금 총액 차이가 6~7퍼센트 정도였다. 그런데 저와 같은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민동회) 회원들 대부분은 최저 등급인 F를 받는데, 2년 연속 낮은 등급을 받으면 최고 등급을 받은 노동자들에 견줘 임금이 1천만 원 남짓 적다.

그러니 평가에서 F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노동자 일부에 해당되지만, 임금피크제 문제도 심각하다.

보통 다른 기업들에서는 대개 59세부터 임금을 깎는데, KT는 56세부터 순차적으로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40퍼센트를 깎는다. 나도 임금피크제 대상자인데, 월급을 받아 보면 임금이 팍팍 깎여 나가는 게 눈에 보인다. 진짜 기가 막힌다.

자녀 학자금을 없앴 것도 불만이 크다. 학자금 지원은 사측이 내놓는 사내 복지금의 이자로 지급해 온 것이다. 사측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닌데, 2014년 대규모 명예퇴직을 압박하면서 없앴 것이다.

그동안 친사측 노조 집행부는 이런

연도별 KT 인력 구조조정 내역 (출처: KT노동인권 백서)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2006	2007	2008	2009	2014	계
퇴출자수	1959	3203	9335	1429	1389	5505	500	550	1245	5992	8304	39411

사진 조종진

문제들에서 사측 편에 서서 다 동의해줬다(2009년 성과연봉제, 2013년 저성과자 해고제도, 2014년 대규모 해고(‘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 노조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다.

계열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떤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처지도 매우 열악하다. 본사 노동자들의 처지보다 계열사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열악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보다 더 열악하다.

예컨대 2014년 [KT 회장] 황창규가 노동자 8천3백4명을 내쫓으면서 개통·AS 업무를 없애고 KT서비스(KTS)라는 계열사를 만들었다. 이 때 쫓겨난 노동자들에게는 3년간 고용 승계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자회사 정규직 채용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KT의 다른 협력업체보다 나쁘다는 게 노동자들의 평가였다. 기본급은 1백40만 원대로 최저임금과 다를 없고 나머지는 실적급으로 지급되며, 기본급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비스 업무다 보니 토요일은 노동자 전원이 일을 하고 심지어 일요일도 절반은 근무를 시킨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이 노동자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사측은 이런 열악한 일자리를 신규 노동자로 채우고

는 4천 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고 생색을 낸다.

이런 상황에 대한 변화 열망도 클 텐데, 분위기는 어떤가?

우리 사회가 국정농단 사태로 떠들썩할 때 KT 조합원들은 사무실에서 최순실 얘기도 안 꺼낼 정도로 얼어 있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특히 임금피크제 노동자들이 그렇다. 노조 집행부의 행태에 분노해 조합비 아깝다고 탈퇴했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바뀌 보자며 다시 가입하기도 한다.

물론 쉬운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에서는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지방 상황은 알기 어려운 데다, 사측이 민동회 동지들을 CFT[업무지원단], 2014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노조 민주화 활동가를 중심으로 3백여 명을 골라내 만든 별도 부서, 도심 주변 외곽 지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모뎀 수거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몰아 넣은 상황이다.

사측의 심한 통제와 어용노조 집행부의 행태 때문에, KT에서 노조 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동지들도 있다. 수년 전에 민동회 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동회는 노조 민주화를 추진해 가는 것이 맞다는 노선을 견지하기로 했

고 어렵지만 활동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철도, 발전, 건강보험공단, 지하철노조도 KT민주화연대에 함께 하기로 했다. 지지와 관심이 크다는 것을 느낀다. 공공운수노조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노동·사회 단체들의 연대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KT민주화연대 활동을 통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동회가 그동안 해 온 1인 시위를 KT민주화연대와 함께 전국 전화국 2백 곳 앞에서 일제히 하면, 위력도 있고 조합원들도 힘을 얻을 것이다. 지역본부 12곳 앞에서 집회도 추진해 보려 한다. KTS 노동자들이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고 조직화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이 연대체의 활동 중 하나다.

단기적으로는 노조 민주화를 위한 11월 노조 선거 대응 활동이 당면 과제다. 노조 선거에 승리하면, 통신 공공성을 위한 활동도 더 힘있게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에도 통신 재국유화 경험은 없는 것을 보면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재국유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투쟁은 가치 있는 투쟁이 될 것이고 국민들의 호응도 클 것으로 생각한다.

인터뷰·정리 이정원

wspaper.org

전교조 대대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논쟁 기사가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 전교조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 지수에 응답함

‘변혁당 안에서 영화 <도가니>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누군가 공개 규탄한다면 당이 ‘닥치고 사과’나 해야 하는 걸까요?

김태현 노동자연대 사무국장

“영화 <도가니> 같은 현실 - 다함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입장”.

2012년 11월 28일 유수진 전 서울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하 존칭 생략하고 본인 뜻에 따라 ‘류한수 진’으로 지칭함)이 주도한 모임이 온라인 상에서 발표한 공개 성명의 제목이다. 게다가 이 성명을 각종 노조 게시판 등 곳곳에 올렸다.

류한수진이 정말로 <도가니>의 소재가 된 실제 사건과 대학문화 편집부 MT 중에 일어난 ‘아한동영상 사건’의 본질이 같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우리 단체를 마치 집단 강간 범죄 자행 단체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는지는 우리로선 알 수 없다.

류한수진의 의도가 어떻든, 이 제목을 본 사람들은 우리 단체와 회원들을 아주 사악한 집단으로 여겼을 것이다.

자신의 조직이 이렇게 비난받는다면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 사회운동위 지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싶지 않을까?

사실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냥 묵묵히 입 다물고 앉아 있을 것인가?

침묵하지 않고 논박하려 할 때, ‘2차 가해’ 하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 아니 사과나 하고 있으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역지사지해 본다면 **불가피하게** 원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알 것이다.

사실 우리 단체는 2014년 11월까지 위와 같은 근거 없는 비방을 그냥 보아 넘겼다. 우리 단체가 변혁당, 노동전선 등과 함께 민주노총 임원선거 한상균 선분을 꾸렸을 때 ‘다함께 · 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가 우리의 연대활동과 그 대상자들마저 비난하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우리는 ‘선본에서 내쫓으라’는 그들의 요구에 맞서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2차가해’가 된다. ‘2차가해’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면 또다시 ‘2차가해’가 된다.

‘2차가해’의 외연도 성폭력의 외연만큼이나 엄청나게 넓고 그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이라고 하므로, 이제 원사건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일관된 ‘2차

해’론자들은 아예 “원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 일갈하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가해(2차가해)일지라도 가해는 가해라고 한다)로 비난받는 단체는 꼼짝없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군소리 없는 사과를 하거나(설사 원사건이 성폭력이 아니어도 ‘성폭력 단체’라는 전과와 오명을 쓴 채), ‘성폭력 단체’라는 비난(또는 비방)을 계속 듣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다가 ‘2차가해’(역시 ‘성폭력’이라고 한다)로 찍혀야 한다.

사실,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은 사건에 대한 조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함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은 결론을 다 내리고는 우리 단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2차가해’라는 무기를 휘둘렀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시인하기를 강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항상 다 그렇게 명백한 것은 아니다. 흔히 ‘성폭력’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 더구나 거의 다 돌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난다.

이때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성폭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주관적 경험을 앞세우는 종류의(주관적) 관념론이다. 그러나 주관적 경험(피해자의 진술로 표현된다)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 일체(증인, 물적 증거, 사건 앞뒤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들)를 종합해 성폭력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돼야 비로소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관적 관념론은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에른스트 마흐와 18세기 아일랜드의 조지 버클리가 정교하게 대변했는데, 레닌은 이들을 철저한 경험주의라며 매우 날카롭게 비판했다.

요컨대 ‘피해자 중심주의’는 주관적 관념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확신이 하도 강한 나머지 이를 극단으로 몰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믿음 수준으로까지 발전한다면 어찌 되는가? 금태섭 변호사는 선입견과 오만(적 보면 사건의 전말을 안다)과 불성실(당연히 확인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게으름)이 판단 착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확신의 함정》, 14쪽).

‘피해자 중심주의’자의 선입견은 모든 여성이 잠재적인 성폭력 피해자이고, 성폭력 피해자가 진실, 온전한 진실,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고 전제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은 누구나 성폭력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도 함축하고 있다.

물론 “압도 다수(서구의 통계로 92퍼센트)의 강간 피해 호소 여성이 진실을 말하고, 오직 극소수(3퍼센트)만이 거짓을 말한다.”(강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태의 ‘성폭력’의 경우엔 이 격차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92퍼센트는 100퍼센트가 아니고 3퍼센트는 0퍼센트가 아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바로 이 명백한 점을 보아넘기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이 독단적 명령이 먹히지 않을까 봐 ‘2차가해’라는 말로 질문과 의견의 자유를(책갈피의 출판의 자유를 포함해) 권위주의적으로 억누르려 해왔다.”(책갈피 출판사의 자기방어 성명)

아님 말고 식인가?

이런 권위주의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사건에 대해 말을 해야 한

다. 변혁당 사회운동위 지수가 말하는 ‘대학문화 ·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

요컨대 2011년 7월 16일 대학문화 수련회에서 두 명의 남녀 학생이 아한동영상을 봤고, 한 명이 옆에서 방관했다. 그 방관자가 당시 노동자연대 회원이어서 졸지에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단체’로 명명된 황당무계한 사건이다.

문제의 동영상을 피해자가 강제로 보게 됐다면, 강제로 보여 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2조에서 정의된 ‘성폭력범죄’의 일종이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판결 사항이 아니었다. 법원이 판결해야 했던 건 그 방관자가 공범이었느냐 여부였고(그 방관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었으므로), 법원은 그가 공범이라는 피해호소인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왜 그의 소속 단체가 ‘성폭력 단체’인가?

법원 판결 따위를 어떻게 믿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물론 현존 국가는 자본주의적 국가이므로 노동계급도 억압하고, 여성도 억압한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인 법원도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결정 하나하나가 억압을 표현하

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급진적이지만 참으로 기계적인 사고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현존 국가는 형태상 부르주아(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이다. 즉, 국가의 사회적 내용으로서 노동자 조직(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을 어쩔 수 없이 포용하는 정체(政體)이다. 이 점이 국가의 계급적 중립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으로서 노동자나 여성의 권리 주장에 형식적으로는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렇기에 통상임금의 상여금 산입이나 불법 파견 인정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일관되게 법원이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반성폭력 운동은 하나의 원칙으로서 피해 여성의 소송 제기를 반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함께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지 모임’도 법원 판결에 항의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2014년 4월 12일 류한수진은 법정 진술서를 제출해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처럼” 말한 것에 대해 두 대학문화 남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만일 법원이 ‘가부장제’ 국가의 기관이라면 해서 안 될 일이었을 것이다.



2017년 5월 25일 '3시STOP공동행동'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이유로 연대체를 해산시키려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사실, 변혁당 사회운동위 지수 등 극단적 반성폭력 운동가들은 실제로는 법원 판결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이다. 그들에겐 오직 피해자 진술이면 충분하다. 믿어라. 믿으면 된다. 안 믿는 건 죄다. 이는 '반여성적' 원죄의 발로이다.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애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성은 호기심으로도 20초짜리 야한 동영상'을 보면 안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도덕주의가 사건의 심각성을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성도 성적 호기심뿐 아니라 성욕도 남성 못지 않게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포르노의 여성 비하를 비판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문제다.

이는 지도적 남성 활동가가 상습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과는 달라서, 규율 문제로 볼 수 없다.

물론 당시에 동영상'을 본 피해자가 화들짝 놀라고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 특히, 보수적 성관념으로 교육받고 인생 경험 적은 젊은 여성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관자에 불과한 동료 신입생 남성을 '성폭력 가해자'라고 공개 비난하는 건 곤란한 일이다. 더구나 관련자의 범위를 훨씬 넘는 온라인 상에서(대학커뮤니티를 포함해) 말이다.

역지사지해서, 여성의 인권만 생각하지 말고 남성의 인권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남자도 인간이니깐).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 때문이라도 반성폭력 운동은 증거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자라면 인권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만하다. 말로 성희롱을 한 정도일지라도 여성 비하라는 부당한 행위를 했으므로 인권 제약은 아닐지라도 크게 비난은 받을 만하다.

원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2차가해'가 된다.
'2차가해'의 외연도 성폭력의 외연만큼이나 엄청나게 넓고 그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이라고 하므로, 이제 원사건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일관된 '2차가해'론자들은 아예 "원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 일갈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수련모임 명목의 여행 중인 청년들이 거의 다 생전 처음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는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등의 지은이 엄기호 교수가 여러 해 전 청소년을 위해 쓴 책의 제목처럼, "포르노 All Boys Do It!"(우리교육, 2004)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덧붙이고자 한다. Some girls do it.

비록 포르노를 반대해도 우리가 포르노를 봤거나 또는 보는 것을 방관한 미숙한 청년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게 올바른 처사는 아니지 않은가. 잣대

가 너무 엄격해, 주도적인 선임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기준과 젊은 청년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별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성폭력'이라는 주홍글씨의 무시무시한 딱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대학문화 편집부 MT 때 동영상 사건의 피해호소인을 백안시할 의도가 전혀 없다.

문제는 공개적인 온라인 비난이다. 그리고 그 비난을 증폭시키는 극단적인 종류의 반성폭력 운동 방식이다.

문제적

이런 문제적 경향, 즉 '2차가해'라는 무기로 입에 재갈 물리기에 순응하게 그동안 거의 모든 진보·좌파 단체들이 택한 실용주의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성 해방과 성적 능동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폭력 외연 과잉확장과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이 3개 한 발의 무기(이하 3각 교리체계)는 여성을 성의 피해자·희생자로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은 성 문제에서도 능동적이고 개방적일 잠재력이 있다. 사회전체의 급진화 시기에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곤 한다. 비록 급진화의 퇴조 이후 왜곡된 형태로 변질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노동자 운동이 외연이 한없이 확장된 성폭력 개념, '피해자 중심주의', '2차가해' 등 3각 교리체계(변혁당 사회운동위 지수도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에 따른 권위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경향을 계속 용인하면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그저 낙인찍힐까 무서워서 운동과 조직들을 분열시키는 예민한 문제에 계속 입을 다물 것이다.

3각 교리체계가 작용하는 모습을 보면 개신교 근본주의를 연상케 한다. 개신교 근본주의처럼 이단 사냥과 낙인('반여성적'이라는) 찍기, 연대·연합

에서 배제하기 시도를 한다. 게다가 개신교 근본주의보다 더 철통같은 방어를 꾀한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변호론을 왕성하게 펴는 반면, 3각 교리체계는 변호론 없이 그저 '입 닥쳐!' 하는 식이다.

이런 비민주적 정치문화가 조장되는 가운데 기회주의의 비옥한 토양이 형성된다. 가령 유명한 '아가씨와 건달들' 사례가 있다. 2008년 좌파 정치단체 해방연대의 간부 김광수 씨(이하 존칭 생략)는 다른 좌파 정치단체 '노동자의힘'(이하 노힘)과 현대차노조 집행권 지향 조합원 그룹 '민투위'의 관계를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에 빗대어 비판했다. 물론 이 비유는 노힘 회원들에게 팬스레 무례하고 모욕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노힘의 일부 여성 회원들이 김광수의 주장을 '성폭력'이라고 규탄하고 더 나아가 김광수와 해방연대를 '반여성적'이라고까지 매도했다. 이는 좌파적 비판을 제압하는 데 극단적 여성주의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다른 사례는 "여성단체의 책수거·폐기를 요구하는 연서명"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 단위의 규탄 연서명" 모두에서 몇몇 인권 운동가가 열심을 보이고 있는 일이다. 이를 두고 어떤 인권 운동가들은 문제인 정부의 인권 운동 재정 지원과 인물 포섭 노력 와중에 노동자연대가 문제인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이유라고 지적한다.

기회주의와 종파주의

3각 교리체계'에 근거한 반성폭력 운동의 문제점은 종파주의로도 나타나고 있다. 부패하기 전의 코민테른(1919~1922)은 특정 이슈를 둘러싸고 공동 행동이 가능하고, 필요하고, 중요한데도 그걸 거부하는 태도를 두고 종파주의라고 명명했다.

안타깝게도 변혁당 사회운동위 지

수는 종파주의를 반기고 있다. "노동자 연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단체의 책수거·폐기를 요구하는 연서명, 3시STOP공동행동의 연대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와 뒤이은 해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 단위의 규탄 연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변혁당 사회운동위 지수에는 미안하게도 이 규탄 캠페인들은 모두 실패했다. 첫째,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논쟁》은 오히려 더 잘 팔리고 있다.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논쟁》수거·폐기 운동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변혁당의 동참도 수치다. 그 책은 사례 언급 부분에서 피해자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출판사는 경험 많은 판사와 변호사들에게도 자문을 구했고, 하나도 문제될 것 없음을 확인했다. 윤리적으로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그 캠페인에 연서명 한 사람들은 그 책을 전혀 읽어 보지도 않았음에 틀림없다.

둘째, 3시STOP공동행동에서 우리 단체를 내쫓으려 한 민주노총 여성문제 담당자 김수* 씨(이하 존칭 생략)의 염원은 간단히 좌절됐다. 추방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아무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노동자연대 추방에 실패하자 김수*은 3시STOP공동행동 해산을 추진했

추천 책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최미진 지음, 120쪽, 5,500원, 책갈피



여성차별 반대 운동 속의 '노동자연대'

다. 3시STOP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뜻을 따라야 마땅했을 텐데, 김수*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해산을 추진한 것이다. 해산은 그의 선택이지, 우리 단체의 선택은 아니다. 그는 여성운동 연대체의 존재 의의를 중시해 해산 추진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거기에 불가피성이란 전혀 없다.

사실 김수*과 노동자연대 갈등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3시STOP공동행동 참여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3시STOP공동행동의 목적과 별 관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신의 방어를 포기하고, 연대체를 나올 수는 없었다.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논쟁》이 자기를 비판한 것을 이유로 김수*이 우리에게 대한 마녀사냥과 주홍글씨 낙인찍기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싸움을 멈출 수는 없다.(마녀사냥은 견해나 사상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책임전가 하는 것이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불필요한 갈등임에도 갈등의 한 축은 몸을 뺄 수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다.

김수*은 노동자연대가 아무리 미워도 여성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연대체란 계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게 아니다. 제한적 특수 목적의 행동을 위한 임시 정치 기구이다. 누가 밟거나 싫다고 모임을 유지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명칭 그대로 여성 노동자들이 특정 일의 특정 시간대에 공동 행동을 하는 게 목적이자, 특징인의 사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변혁당 사회운동위 지수는 김수*의 노력이 참담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3시STOP공동행동 해산 추진 책임의 소재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 소속의 일부 단체들이 노동자연대 축출을 시도한 것도 소속 단체의 다수를 못 얻어 실패했다. 변혁당 사회운동위 지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없는 일 취급해선 안 된다. 변혁당 사회운동위 지수가 언급하고 있는 '규탄 연서명'은 일부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체회의의 결정에 불복하고 벌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차별금

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다시금 실패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묻는다. 대중에게 책임 지려는 자세는 있는 것인가? 개혁입법 제정이라 해서 대중 행동 없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기는 작금의 한국 현실에서 쉽지 않다. 게다가 만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돼도 실제로 차별이 없어지느냐는 건 별개 문제이다. 기층 수준에서 성소수자들의 자력 활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일은 누굴 마녀사냥하고 공동 활동에서 추방하려 애쓰는 종파주의로는 건설되기 어렵다.

노동자연대에 따끔한 맛을 보여 주고 싶어 하는 위 세 캠페인의 주도자들은 서로 겹치며 그나마 종파주의 때문에 세력도 얼마 안 된다. 정의당이나 자민통계 같은 대중 정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변혁당 사회운동위 지수는 여연의 주요 인사들이나 주축 단체도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여성단체 거의 전부가 책 폐기와 수거를 요구한 것처럼 주장해서도 안 된다.

설사 변혁당 사회운동위 지수의 말대로 규탄 연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해도, 그 자체가 진리가 되지는 않는다. 다수성이 진리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진부한 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한 가지 사례는 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이다. 처음에 좌파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 사건이 일종의 착잔 속 폭력으로 설왕설래 되고 있을 때 세력균형은 류한수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주류 개혁파 언론이 류한수진에게 동정적인 보도를 하며 사건이 널리 알려지자 학내 기류가 변했다. 순식간에 세력균형이 역전됐다. 잘못된 종류의 반성폭력 운동은 사상누각임이 드러났다.

28년 전쯤 한국의 좌파는 적어도 몇만 명이었다. 하지만 스탈린주의 사상의 영향이 지배적이어서, 동유럽과 소련이 끝이어서 몰락하자 좌파도 일부가 몰락하며 급속히 약화됐다. 오늘날의 사상적 혼란도 이때 비롯한 것이다.

1백여 년 전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다수성이 진리를 보증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당시 1백만 명이 넘는 당원에 1백 종이 넘는 각종 신문을 발행하

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 내의 국가'로 불렸다. 하지만 제1차세계대전 개전 즉시 정부의 전쟁 공채 발행에 찬성표를 던지며 유럽 노동계급을 자국 지배계급 지지로 몰아갔다. 4년 뒤 혁명이 일어나 이후 5년간 전국을 뒤흔들어 놓는 동안 SPD는 노동계급을 헛갈리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공동전선

변혁당이 노동자연대의 '2차가해' 중단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단지 우리가 낸 책 때문만이 아니라 더 폭넓은 정치적 차이 때문이라는 것은 변혁당 사회운동위 지수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공동전선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폭넓은 차이가 있는 조직들이 특정 이슈(제한된 개수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를 놓고 행동 통일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노동운동이 장기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사용자 일반의 공세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은 특히 그렇다.

레닌은 《좌파적 공산주의 — 유치증》에서 정치적 순수함을 명분으로 연대를 거부하는 서구(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공산당 안팎의 좌파들을 비판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성폭력' 문제에서의 도덕적 '순수함'을 명분으로 일부 소그룹과 개인들이 갖가지 방식으로 연대 파괴를 하고 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당화된다고 확신할지 모른다.

하지만 도덕주의는 이상주의(관념론)이므로 모순과 위선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사례와 개인들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풀어놓고 싶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연대 혼내주기 캠페인이 지속된다면 우리로서는 정당방위를 위해 실제적 진실을 둘러싼 시시비비를 계속 가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유치한 게임이 끝나기를 원한다. 노동운동은 기반없는 토론과 논쟁의 민주적 전통을 갖고 있다. 쟁길 게 많은 친종간계급적 운동이나 뒷담화와 비방 캠페인에 탐닉하는 법이다. "차이를 힘으로" 전환시키고 싶다면 당당하게 정치적 논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차이를 이유로 연대를 파괴하거나 그런 행위를 두둔해선 안 된다.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 낙태권 운동의 변천사

메리 스미스 아일랜드 사회주의자

근 1백50년 동안 가톨릭 교회는 아일랜드 사회 전체를 지배했다.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는 가장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였고 그 지배는 잔혹했다. 교회가 운영하는 ‘엄마와 아기의 집’에서는 이른바 “(출생이) 몇몇지 못한” 아이들이 엄마들에게서 강제로 분리돼 미국으로 팔려가거나 방치돼 죽곤 했고, ‘막달레나 세탁소’에서는 “타락한” 여성들이 수십 년씩 노예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산업학교”[빈민법에 의해 가난한 아이들을 가두는 수용시설]에서는 빈민·노동계급 자녀들이 구타와 학대에 시달렸다.

상황이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태고”부터 이어진 전통도 아니고, 아일랜드인의 유전자 탓도 아니다. 아일랜드인 대다수가 예로부터 가톨릭 신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톨릭 교회가 이처럼 강고한 지배력을 구축한 것은 1840년대의 대기근으로 1백만 명 이상이 아사하고 그 밖에 수백만 명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아일랜드 인구가 거의 반 토막(1841년 8백만 명 → 1861년 4백50만 명) 나고부터다.

기근은 아일랜드의 가족 구조를 바꿔 놓았다. 결혼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중년 이상의 남성이 자신보다 젊은 여성(그러나 과거에 비해 초혼 연령이 상승한)과 결혼하는 관행이 확립됐다.

교회는 이처럼 결혼을 늦게 하는 상황에서도 혼전순결이 지켜지도록 성생활을 단속했다.

가톨릭 교회의 장악력은, 1916~22년 아일랜드 혁명을 패배시킨 반혁명의 결과로 더욱 강해졌다. 아일랜드 혁명은 1917년 러시아 혁명, 1918~23년 독일 혁명, 그리고 1919~20년 이탈리아의 “붉은 2년”을 포함한 국제적 혁명 물결의 일부였다. 1916년 사회주의자 제임스 코넬리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패트릭 피어스가 이끈 부활절 봉기로 시작해 대중 파업과 노동자들의 점거와 지역 소비에트 수립, 그리고 10만 명을 아일랜드 공화국군(IRA)에 입대시킨 아일랜드 독립전쟁으로 이어진다. 이 투쟁으로 남부의 26개 카운티로 구성된 “자유국”은 영국으로부터 부분적 독립을 얻는다.

이후 영국-아일랜드 협정[아일랜드의 완전한 독립 요구로부터 후퇴한 내용의 1921년 협정으로,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통치할 근거가 됨에 반대한 IRA 분파가, 영국의 지원을 받은 [IRA 내 협정 찬성파인] 마이클 콜린스의 반혁명에 패배하고 결국 아일랜드 분할이 관철돼 [1923년] 두 개의 반동적 정부가 수립된다. 북쪽에는 영국령에 속하고 보수적 병합파(영국에의 병합을 지지)의 지배를 받는 개신교 정부가 들어서고(북아일랜드), 남쪽에는 보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가톨릭 국가(아일랜드공화국)가 생긴다.

아일랜드공화국에서 부르주아지와 가톨릭 교회가 맺은 동맹은 구체적으로 두 인물의 동맹 관계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는 18세기부터 1996년까지 미혼모 여성들을 강제로 수용해서 세탁일을 시켰다. 여성과 아동의 처우는 끔찍했고 한 곳에서는 1백55구의 시신이 암매장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바로 에이먼 데 발레라 총리(이후 대통령)와 존 찰스 맥퀘이드 추기경으로 이 둘은 1930~40년대에 아일랜드를 통치하고 종교색 짙은 헌법을 작성했다.

가톨릭 교회는 아일랜드 시민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을 쥐락펴락 했는데, 특히 교육과 병원 운영을 틀어쥐었다. 교회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관계 일반(특히 여성의 성생활)을 부정하고 혐오하며 억누르는 것이었다. 그 핵심에는 낙태에 대한 완고한 반대가 있다. 교회의 끈질긴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로, 피임은 1978년에 와서야 제한적이거나 합법화됐고, 이혼은 1995년까지 불법이었다!

북아일랜드의 병합파와 개신교파는 “로마[교황]의 지배” 즉, 통일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지만 한 가지 사안에서만만큼은 언제나 “로마”와 완벽히 의견이 일치했는데, 바로 섹스와 낙태에 대한 보수적 태도에서 그랬다.

아일랜드의 변화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가난했으며 교회의 지배가 계속됐다. 그러나 1990년

대 이래 경제 발전과 꾸준한 투쟁에 힘입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켈트의 호랑이”라 불릴 정도의 경제 호황 덕에 아일랜드는 탈바꿈했다. 가톨릭 지배의 근간을 이루던 농경 사회구조를 허무는 거대한 규모의 도시화가 일어났다. 또 대대적인 이주민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가 됐고, 무엇보다 여성들이 대규모로 일터에 진출했다.

여성 노동인구는 1996년 48만 8천 명이었는데 1971년과 비교해 21만 3천 명 많아진 것이다. [아일랜드공화국 전체 인구는 약 4백만 명이다.] 같은 기간 남성 노동인구가 겨우 2만 3천 명 증가한 데 비하면 놀라운 수치다. 1996년 여성 노동자의 절반 가량은 기혼 여성이었다. 기혼 여성 24만 1천 4백 명이 가정 밖에서 유급노동을 했는데, 이는 1971년 대비 6백 퍼센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숨 막히는 구습과 차별을 거부하는 새로운 세대의 여성과 남성이 등장했다.

물론 변화가 저절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거리에서 벌어진 대중 투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낙태권을 부정하는 8차 개헌이 통과된 지 9년 뒤인 1992년 초, 이른바 “X 사건”이 떠올랐

다. 2월 19일, 당시 법무장관은 14세 소녀(“미스 X”)가 영국으로 건너가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출국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발한다. X는 강간으로 임신하게 된 경우였고, 자살까지 생각한다고 알려졌다.

정부의 대응에 전국이 분노로 들끓었다. 수많은 젊은 여성과 남성이 연일 밤낮으로 거리에 나와 “영국에 가도록 X를 내버려 두라”고 외쳤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는 1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반쯤 자발적인 행진이 몇 차례 벌어졌는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런던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인 것과 같다. 코르크, 워터포드, 골웨이 등 중소도시에서도 비슷한 비율의 시위대가 거리를 메웠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겁에 질린 정부와 고등법원이 결국 물러섰다.

이 승리는 크나큰 돌파구를 열었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 가톨릭 교회의 뿌리깊은 위선들이 하나 둘 폭로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주교인 에이먼 케isi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파트너를 통해 드러났고, 정절을 설교하기로 유명한 또 다른 신부는 그의 ‘가정부’와 두 아들을 낳았음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차별적인 구제에서 신부나 수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증언할 용기를 얻었다.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한 주가 멀다하고 신부들의 체포 소식이 언론을 장식했다. 1993~97년 아일랜드 각지에서 신부들이 강간이나 성적 학대 혐의로 잇따라 법정에 섰고 피해자 중에는 8세 어린이도 있었다. 더욱이 교회 당국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대개 교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이 처벌을 면하도록 힘썼음이 드러났다. 교회의 도덕적 권위는 재기불능으로 실추됐다.

성에 대한 태도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는 2015년 출생한 아이 10명 중 4명이 혼외 출생자이며 이 가운데 59퍼센트가 (혼전)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특히 2015년 동성 결혼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압도적 지지(찬성 62.07퍼센트, 반대 37.93퍼센트)로 나타났고, 수도세 인상 반대 투쟁으로 급진화한 더블린의 노동계급 거주지에서는 찬성률이 80퍼센트를 넘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아일랜드를 지배해 온 양대 정당인 피네 게일과 피아나 페일은 자신들을 “현대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당으로 포장한다. [피네 게일의] 신임 총리 리오 바라드카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자궁심 행진에 동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두 정당 모두, 변화의 기미가 없는 보수적 영농인과 재계 인사들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교회는 여전히 막강한 제도적 영향력뿐 아니라(아직 대부분의 학교와 다수의 병원을 운영한다) 무시 못할 지지자 동원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

번역 이예송, 천경록

※ 12면에 현재 아일랜드의 낙태권 운동 기사가 있습니다



1971년 “피임 열차”를 타는 ‘아일랜드 여성 해방 운동’ 활동가들 당시 아일랜드는 피임도 불법이었기 때문에 콘돔, 살정제 등을 합법적으로 구입하려면 북아일랜드까지 가야 했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핑크머니, 핑크워싱 그리고 성소수자 운동

★ 랜섬웨어, 미국국가안보국(NSA), MS원도우

★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의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부스 취소 유감



아일랜드 사회주의자 특별 기고

아일랜드에서 낙태권 옹호 투쟁이 성장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낙태약을 구하려 하는 것만으로도 14년 형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낙태에 억압적이다. 그러나 최근 낙태 처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가 뜨겁고, 9월 30일에 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준비 중이다.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도하는 좌파 선거 연합체 '이윤보다 인간을'에서 활동하는 **메리 스미스**(아래 사진)가 현지 상황과 아일랜드 낙태권 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짚는 글을 본지에 기고했다.

칠레에서 한국, 엘살바도르, 미국, 폴란드, 인도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낙태권을 둘러싸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투쟁은 국제적이다. 이 국제적 전쟁에서 아일랜드는 (남쪽의 아일랜드 공화국뿐 아니라 아직 영국의 지배를 받는 북부의 6개 카운티도 포함해서) 특히 중요한 전선 가운데 하나다.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서도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 옹호는 사회주의자와 페미니스트들의 기본 원칙에 속하는데, 여성이 신체적 자기결정권 없이 온전한 평등을 누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일랜드에서는 여성의 선택권 문제가 현 사회·정치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핵심 모순 또는 단층선을 이루고 있다. 이 모순은 무엇보다 8차 개헌을 둘러싼 투쟁에 집약돼 있다.[국내에는 "수정헌법 8조"라고 잘못 번역된 경우가 많다]

1983년 국민투표로 가결된 8차 개헌은 태아가 산모와 동등한 생명권을 갖는다고 [헌법 40조 3.3항에]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낙태는 극히 한정적인 경우를 빼면 일절 불법이다. 지금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는 심지어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에게 치명적 기형이 있어도(즉,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낙태가 불허된다. [가톨릭 교회 등] 보수 세력은 낙태 전선에서 한사코 후퇴하지 않으려 하며, 이들은 8차 개헌을 수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이 나라의 거의 모든 가톨릭 교구가 지지한 최근의 어느 시위에서 '프로라이프'(즉, 여성의 선택권 반대) 세력은 더블린 거리에 최소 3만 명을 동원했다.

그러나 8차 개헌 조항 철폐 운동도 활력 있게 벌어지고 있다. 올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수많은 젊은 여성과 남성이 더블린 중심가의 오코널 다리를 몇 시간 동안 점거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3만 명이 [낙태에 관한] 국민투표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의회로 행진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에도 9월 30일 더블린에서 거대한 낙태권 옹호 행진을, 그리고 10월 14일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또 다른 행진을 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는 낙태 문제에 대해 수십 년 동



안 답을 회피해 왔지만, 지금 봤을 때는 국민투표 실시 요구를 결국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정부는 국민투표 실시 시점을 교황이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2018년으로 미루려는 듯하다. 현재 아일랜드인 다수는 확실한 8차 개헌 조항 철폐 입장이다. 그러나 진정한 쟁점은 관련 내용을 무엇으로 대체하느냐일 것이다. 또 다른 제한 규정을 도입해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좌파가 주장하듯 누구나 무상으로 안전하게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사회주의자들의 구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특히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당원이자 [SWP가 주도하는 선거 연합체이자 원내 정당인] '이윤보다 인간을' 당원들은 낙태권 운동 초기부터 주도적 구실을 해왔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그럴 수 있었던 데는 첫째, 우리가 낙태는 여성의 선택이라는 원칙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낙태가 계급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부유한 여성들은 언제나 낙태시술을 손쉽게 받을 수 있던 반면, 그럴 형편이 못 되는 노동계급 여성(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난민)에게 낙태 금지는 불비례하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거리에서 대중 시위를 건설하며 "민중의 힘"에 의지하는 전략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낙태권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우리가 배출한 하원 의원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 의원인 브리드 스미스는 "민중의 호민관"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브리드 스미스는 자신의 낙태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아일랜드 의회에서 전례



사진 출처 Ruth Medber

낙태 처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8차 개헌으로 삽입됨)을 철폐하라는 요구가 뜨겁다

가 없던 일이다. [그녀의 소속 정당] '이윤보다 인간을'은 국회에서 낙태 형량을 현행 징역 14년에서 1 유로 벌금으로 줄이는, 사실상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낙태 비범죄화 법안이 과거 의회에서 위헌이라는 이유로 부결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법안 상정을 위해 상징적으로 1 유로 벌금을 제안한 것일 뿐, 그 자신은 낙태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류정당들에 의해 부결됐다.)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사회주의자들은 노동계급 거주지역에서 기층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특히, 억지스럽고 무원칙하게 타협하며 여성들의 요구를 희석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노동당과 신파인당이 능히 그럴 수 있다).

여성들이 낙태권을 쟁취하는 것은 스러져가는 가톨릭 교회의 권력뿐 아니라 아일랜드 전체 지배계급과 주류정당의 헤게모니에 강력한 한 방을 날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날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

번역 이예송, 천경록

※ 11면에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 낙태권 운동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할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